

“황교안 만성담마진 판정 6일 전 병역 면제”

< 두드러기 >

새정치 김광진 의원 “치료·약복용 근거 증명 못해”

“변호사시절 3건 선임계 제출않고 변론... 장관 청문회 위증”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과 변호사법 위반 및 위증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청문회 분위기를 잡기에 나섰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열린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만성두드러기)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며 “질문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 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폐기를 했다고 한

다”며 “황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본인의 만성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중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 내역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 변론을 맡았으며, 이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위증했다는 의혹을 거듭 추궁했다.

홍 의원은 “전관예우를 둘러싼 검증 상황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 자격이 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위증이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범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날 중 상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

특위를 소집해 문서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재단법인에 이사로 재직중이라며 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1년 개신교 계열의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취임한 뒤 사임 기록이 없다”며 “2003년 단 한번 3년간 유효한 겸직허가만 받은 것도 사후 허가일 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이후로도 겸직 재허가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장관 청문회 때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한 것은 위증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분증 안 보여주면 여객선 승선 못한다

전산발권 시스템 운영도

국민안전처 법개정안 추진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등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승선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 유·도선 안전혁신 TF를 구성해 부처 협의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객이 배에 오를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전산발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것 등이다.

휴업했거나 운항을 중단했던 선박이 영업을 재개하려면 반드시 신고할 것, 기상특보 발효 시 세부적인 운항 통제 기준 마련, 선원 비상훈련의 무화,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처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부패평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

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또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회의체인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차관 또는 실장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매달 주기적으로 열고 시기별 안전대책과 현안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까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현황과 야영장 안전 관리, 여름철 물놀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또 각 지역의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과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달 초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교부액을 산정해 이달 말까지는 각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외에도 광주 U-대회에 대비한 정부합동안전점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안전산업 분류체계 마련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 양쯔강 유람선 침몰 사망자 75명으로 늘어

지난 1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쟈리(監利)현 부근 양쯔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의 사망자가 4일 오후 6시까지 75명으로 늘었다.

중국중앙(CC)TV는 침몰한 유람선 ‘동방之星’(東方之星·동방의 별)에 대한 구조작업에서 10구의 시신이 추가 인양돼 사망자가 75명으로 증가했다고 4일 보도했다.

추가로 구조된 사람이 없어 생존자는 14명으로 전날과 같다. 이로써 모두 456명이 탑승한 유람선에서 367명이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국 당국은 강물 위로 드러난 침몰선 바닥에 3개의 구멍을 뚫고 선내로 진입해 생존자를 찾고 있으며 잠수를 통한 구조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장발장 은행 개점식 박수치는 염수정 추기경
염수정 추기경, 장발장은행 홍세화 은행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홍중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발장은행 주최로 열린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서 벌금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장발장은 행은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은행으로 지난 2월에 출범했다.

마을기업 선정 주먹구구 ... 친족 운영 기업에 혈세 지원

3개 기업에 1억3000만원 보조 전남도, 강진군 감사서 적발

공공성이 짙은 일부 마을기업 선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사실상 친족이 운영하는 ‘사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선정해 혈세를 지원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강진군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지난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강진군의 A법인 등 3

개 법인은 출자자 5~6명 중 2~6명이 친족이다.

이들의 지분은 전체 출자액의 55~100%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어긋나는데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강진군은 이처럼 사기업 성격을 띤 3개 기업에 2013~2014년 보조금 1억327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사업비 10% 이상은 사업참여 주민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돼 있는데도 대표자 1인이 전액 부담하고 참여 주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뒤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법인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메주 건조장 등 262㎡의 시설물에 군수 승인 없이 2880만원 상당의 담보도 설정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이처럼 부적절한 사례가 속출한데도 제재 하지 않았다. 도는 강진군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조치했

다.

전남도 관계자는 “강진군 외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이 잘못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일정기간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받는다.

도내에는 올해 행자부 지정 마을기업 109곳, 전남도 지정 마을기업 52곳 등 총 161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 지정 마을기업들에는 12억원, 전남도 지정 마을기업들에는 4억원이 지원된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건설기술용역 평가 투명성 높인다

기술심의위 심의 강화

평가위원도 10명으로 늘려

광주시는 4일 “건설기술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기술심의를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술심의회는 건설기술용역 업체 선정 시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사전에 평가해 입찰참여 자격여부를 선정하는 제도다.

용역 금액과 과업 난이도에 따라 1단계 정량적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후 2단계 정성적 기술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TP·Technical Proposal)를 실시한다.

1단계 PQ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이며, 2단계는 기술자평가서 평가·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친다.

기존에는 용역 발주부서에서 기술평가 방법을 결정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액기준과 난이도 기준을 엄격하게 사전 심의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술평가를 한다.

기술평가 위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심도있는 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는 전문분야를 최대한 확대해 작성하고 당일 참여업체 임의 아래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하는 등 참여업체와 평가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평가항목 등급별 가중치는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일부 위원의 편향 평가를 최종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탄기·기술제안인찰 등의 실제 평가 심의의 공정성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회와 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연임을 금지하는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즈를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 수술 후기 아간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증-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